

판·검사도 형사처벌... '법외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중 첫번째 형법 개정안 처리...국힘, 퇴장 與, 위헌 논란에 '처벌 기준' 등 완화된 수정안 당론 채택

판사와 검사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외곡죄' 신설 법안이 2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기밀을 비롯해 국가 첨단기술을 유출하는 간첩 행위의 처벌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모든 외국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이 선포되자 전원 퇴장해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인 법 외곡죄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첫 번째 단추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법 왜곡 행위의 기준도 엄격하게 명시됐다. 법령이 정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뻔히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마땅히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배제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주요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 위조, 변조하는 행위도 물론이고, 조작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나 재판에 인용한 경우도 법 왜곡으로 규정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인

정하는 행위 역시 처벌 명단에 올랐다.

다만,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판단은 처벌의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 스파이 등 국가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기존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그 대상을 오직 북한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방국이나 제3국을 위한 치명적인 스파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법 외곡죄 처리 과정에서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진통도 상당했다.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의 상정을 불과 30분 앞둔 25일 독소조항을 일부 탈어낸 수정안을 당론으로 급히 채택했다.

이에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도부의 수정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법 외곡죄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신호탄으로 여야 간 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처리된 법안에 이어 나머지 사법개혁 핵심 법안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역시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검찰 개혁, 혁신당발 입법 통해 완성해야”

서왕진 원내대표 “정부 개혁안, 국민 기대 못미쳐... 보완 필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검찰권 오남용의 기동권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정부안은 중수정 조직 일원화 등 일부 진전은 있으나 공소청 수장의 명칭과 조직 구조, 검사 신분 등 핵심 쟁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이 없다면 조국혁신당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조국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요구를 상기하며 “적법 절차 위배와 허위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줄기와 뿌리를 제거하는 강력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병호 기자 justh@kwangju.co.kr



기초단체장들 “자치분권 강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26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TK 의원들 “통합 찬성”...특별법 합의 처리 가능성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법’과 동시 통과 관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 특별법’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2월 국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텃밭(TK)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 특별법 처리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법제사법위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전

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을 처리하면서도 국민의힘 내 일부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을 보류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최종 합의에 이를 것 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대구 관련 법안에 대해 “잘 정리돼 법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직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해 결정될 수 있게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상인 전남·광주 통합법에 대해 “합의 처리로 정리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비슷한 법안인 전남·광주 통합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3일까지 최대 7박 8일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의 처리 예상안건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국회 안팎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것으로 보여 2월 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선 앞 애타는 중진들...지도부는 느긋

국힘 지선 승리 위해 ‘尹 절연’ 요구...장동혁 대표 “속고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와 만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및 당의 노선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중배 의원은 이날 국회 비공개 회동 직후 취재

진에게 당 대표 역시 다가올 선거의 엄중함에 공감했으며, 위기 타개를 위해 깊이 고심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중진들의 대어 투쟁력 강화 및 선거 대비를 위한 당 대표 주재 최고중진회의의 요구를 장 대표가

수용해, 과거 폐지됐던 해당 회의체가 다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석한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노선 수정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승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빠진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회동에는 조경태, 주호영 등 총 17명의 중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사기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6M7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